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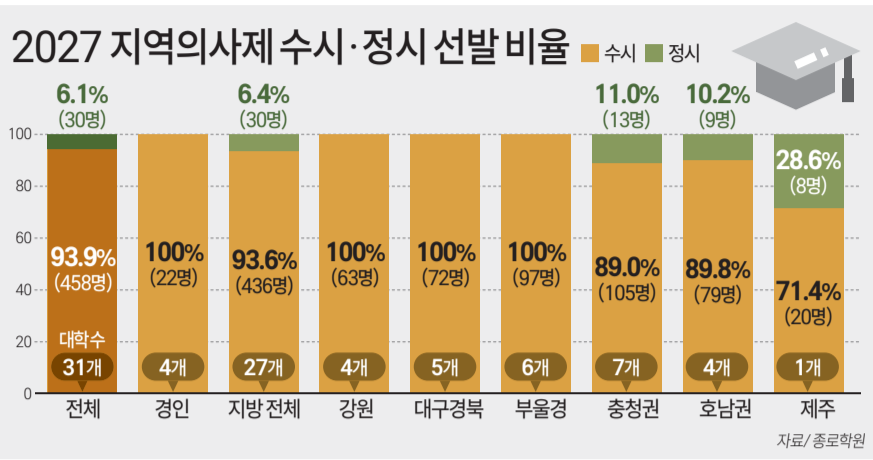
첫 지역의사제 선발, 수시 모집이 94%... 수능 최저 필수

31개 의대 488명 중 458명 수시 선발 수능최저 적용하지 않는 인원 11명뿐 내신 관리만으로 합격 장담 어려워

2027학년도 첫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성균관대·인하대 등 일부 전형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1개 의대 지역의사제 모집인원 대부분이 수시로 선발되는 가운데, 수시 모집 인원의 98%가량이 수능 최저를 적용해 수험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합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1개 의대 지역의사제 모집인원은 총 488명이다. 이 가운데 458명(93.9%)이 수시에서 선발된다. 정시 선발 인원은 30명으로 전체의 6.1%에 그친다.

지역별로는 경인권 4개 대학 22명, 강원권 4개 대학 63명, 대구·경북권 5개 대학 72명, 부산·울산·경남권 6개 대학 97명이 모두



수시에서 선발된다. 충청권은 7개 대학 118명 중 105명(89.0%), 호남권은 4개 대학 88명 중 79명(89.8%), 제주권은 1개 대학 28명 중 20명(71.4%)을 수시로 뽑는다.

지역의사제 선발 31개 대학 가운데 28개 대학은 수시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시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은 충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3개 대학이다. 충북대는 지역의사제 모집인원 30명 중 13명, 전남대는 31명 중 9명, 제주대는 28명 중

8명을 정시에서 선발한다. 수시 선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이 매우 높다. 전국 31개 의대의 지역의사제 수시 모집인원 458명 가운데 447명(97.6%)이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11명(2.4%)에 불과하다. 강원권 4개 대학 63명, 대구·경북권 5개 대학 72명, 부산·울산·경남권 6개 대학 97명, 호남권 4개 대학 79명, 충청권 7개 대

학 105명은 수시 모집 전원에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제주대는 수시 선발 20명 중 18명(90.0%)에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경인권은 4개 대학 수시 선발 22명 중 13명(59.1%)이 수능 최저 적용 대상이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성균관대 3명, 인하대 6명, 제주대 2명 등 3개 대학 11명뿐이다. 제주대의 경우 수시 선발 20명 가운데 18명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2명만 미적용 대상이다.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을 보면 가천대는 3개 영역 각 1등급을 요구한다. 아주대는 4개 영역 등급합 6, 부산대·동국대(WISE)는 3개 영역 등급합 4를 적용한다. 연세대(미래)·경북대·영남대·울산대·한림대·원광대·순천향대 등은 3개 영역 등급합 5를 요구한다. 건국대(글로벌)·제주대·충남대·충북대·전남대·전북대 등은 3개 영역 등급합 6을 기준으로 하며, 단국대(천안)는 전형에 따라 3개 영역 등급합 5 또는 6을 적용한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첫 선발에서 학

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을 함께 갖춘 상위권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의사제 수시 합격자가 자연계 최상위권 일반학과 지원층과 겹칠 경우 일부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상위권 N수생 규모가 늘어날 경우 합격선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의대 모집정원이 2025학년도 확대됐다가 2026학년도 줄었고, 2027학년도에 다시 확대되는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의사제는 첫해부터 수시 선발 비중이 매우 높지만,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어 내신 관리만으로는 합격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수험생들은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과 최근 의대 모집정원 변화, N수생 유입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lhj@metroseoul.co.kr



metro

박태원 중앙대 이사, 공학관 기금 3억 전달

“강연 통해 모은 정성, 인재 육성 보탬” 반도체 클린룸 등 융합 연구공간 조성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박태원 이사가 중앙대 미래 AX 공학관 건립을 위해 발전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는 10일 서울 캠퍼스 201관(본관)에서 미래 AX 공학관 건립을 위한 박태원 이사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이사를 비롯해 이현순 이사장, 고석범 상임이사, 박세현 총장, 고중혁 연구부총장, 전향숙 다빈치캠퍼스부총장, 이무열 대외협력본부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한 3억원은 '미래 AX 공학관'의 건립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미래 AX 공학관은 202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5만6740㎡,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캠퍼스 내 단일 건물 기준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 시설로,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 등을 갖춘 첨단 융합 연구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학



(왼쪽부터) 전향숙 다빈치캠퍼스부총장, 고중혁 연구부총장, 고석범 상임이사, 박태원 이사, 이현순 이사장, 박세현 총장, 나창훈 대외협력팀장, 이무열 대외협력본부장. /중앙대

은 이를 통해 학문 분야 간 경계를 낮추고, 사람과 학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유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이사는 "이번에 전달하는 기금은 지난 3년간 교육 현장에서 강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정성이 담긴 돈"이라며 "미래 인재를 위한 대학의 연구와 인재 육성에 값지고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현 총장은 "대학의 재정적 요구가

큰 시기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박태원 이사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세계 속의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키워내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두산그룹 4세 경영인으로, K EDGE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컴 부회장과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를 맡고 있다.

/이현진 기자

경험격차 해소... 서울린 '동행멘토단' 출범

대학생·중장년 멘토 109명 참여 22일부터 회원 신청 접수

서울린이 교과 학습 중심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 경험까지 넓힌다. 가정 형편에 따라 벌어지는 청소년의 경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과 중장년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해 관심사와 진로 탐색을 돕는 방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부터 서울린 초·중·고 회원을 대상으로 '서울린 동행멘토단' 참여 신청을 받는다. 동행멘토단은 기존 교과 학습 중심 멘토링에서 나아가 음악·미술·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가 청소년의 관심사와 진로 탐색을 돕는 경험 중심 멘토링이다.

동행멘토단은 총 109명으로 구성됐다. 대학생 멘토 82명과 중장년 멘토 27명이 참여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멘티가 선택한 분야와 희망 지역, 멘토 109명의 전공과 활동 지역 데이터를 연계해 1대1 맞춤

형 매칭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을 우선 반영해 매칭을 진행할 계획이다.

멘토링 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기타 활동 등 총 10개 분야다. 음악 분야에서는 피아노·바이올린·기타 등 악기 연주, 미술 분야에서는 수채화·드로잉·웹툰 등을 다룬다. 댄스, 사진·미디어아트·영상편집, 서사창작과 글쓰기 등도 마련된다. 체육 분야에서는 수영·볼링, 필라테스·요가 등이, 기타 분야에서는 바둑·체스, AI 활용, 제2외국어 등이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서울린 초·중·고 회원은 22일부터 서울린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뒤 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신청자의 활동 분야와 희망 지역 등 조건이 맞는 멘토·멘티부터 순차적으로 매칭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 대장 등 해제취락 정비 숨통

도내 30개 지역 약 2만호 주택 공급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지역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취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즉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마을이 해제취락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부분 저층 건축만 가능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아파트 건립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이후에만 가능해 주민들이 수년간 노후 주거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착공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대장안 해제취락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개설했던 '지울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허용돼 주민들의 사업 선택권이 확대됐다.

또한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제한됐던 규정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폭 15m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분리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고양시 “시청 사칭 납품사기 주의하세요”

위조 공문서·명함 전송하기도

고양시가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와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사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사칭범은 고양시청 직원을 가장해 관내 업체에 전화로 물품 구매와 납품을 요청했으며,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칭범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납품을 서두르도록 압박했으며, 위조 문서에는 시청 공식 행정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납품 요청을 받은 업체가 해당 부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관련 공문서와 명함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사한 수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납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고양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식 행정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